



PUBLIC POLICY & REGULATION

[헌법·행정] 조달청 112개 규제 검토, 달라질 경쟁입찰 환경은?

조달청 112개 규제 검토, 달라질 경쟁입찰 환경은?

공공조달이 규제 중심에서 자율신뢰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112개 규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낡은 계약 관행을 정비하고 기업 자율성과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추진 중입니다. 합인행사 제한 삭제, 기술용역 입찰도 선입찰·후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변화하는 조달환경에 발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SI로 하도급 계약감시”, 불법 하도급 리스크 줄이려면

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을 SI로 점검하는 플랫폼을 도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이행 여부 등을 자동 감시해 위반 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은 관행과 실수 등을 이유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어려워지고 위반 시 즉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I 감지 플랫폼 시행 이전, 내부 자가점검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입니다.

현재, 노란봉투법 각하... 노란봉투법 리스크 점검 ‘골든타임’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청구인 부적격으로 각하했습니다. 위헌 여부는 판단되지 않아 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경쟁계는 법 시행에 앞서 보완입법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약 4개월 앞둔 지금, 노란봉투법의 실질적 지배력을 검토하여 지배구조와 노무관계를 점검할 ‘골든타임’이 됩니다.

CASE STUDY

판결분석

민간임대주택법 개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현재 판단은?

전략물자 상환허가 규정, 헌법 위반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태양전자, OLED 제조기술, ‘첨단기술’ 인정 소지 크다는 대법원

PROPOSED BILL

최신 개정·발의안

행정청 AI 활용 정보제공에 ‘실명요청권’ 행사 가능한 행정절차법 개정안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규정한 ‘갑질 방지’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1,2심 무죄 시 검찰 상고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POLICY BRIEF

중앙 부처 동향

산업통상부, 에너지공기업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추진계획 발표

공정위, 쿠팡·론텐츠웨이브 등 4개사 ‘다크 패턴’ 제재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발표

4,800개 AI 중소기업 지원할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

INSIGHTS

언론 속 대론

머니투데이



배임죄 폐지로 한숨 돌렸지만...기업들 '민사 리스크' 대비할때

최근 정부가 '경제형법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 이후 기업은 강화될 민사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임원책임배상보험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론의 이일권 변호사가 배임죄 폐지 이후 전망에 대해 짚어줍니다.

머니투데이



안정적 자산 관리, 기업 미래 가르는 결정적 요소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미수채권이 급증하며 기업 유동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는 생존 전략이며, 적법한 절차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호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이상권 변호사가 기업의 안정적 자산 관리에 대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한국경제



'목시적 합의' 종언...프랜차이즈 업계 뒤흔든 차액가맹금 판결

서울고법이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며, 목시적 합의나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전반의 수익 구조 투명성과 신뢰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가맹본부는 계약서 명시, 정보공개서의 일지, 회계 구조 정비 등 제도적 대응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EEPA 근거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통상법을 활용해 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내 수출기업은 HS code와 원산지를 정확히 검토하고, FOB 기준 과세방식을 활용해 내륙운임·서비스비용 등을 공제해야 합니다. 김대론 관세전문위원이 기업의 합법적 관세 부담 저하를 강조했습니다.

CONTACT

곽내원

대표총괄변호사 T.070-5117-2950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T.070-7510-1046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T.070-7510-2018

손계준

총괄변호사 T.070-5117-3709

전호철

수석변호사 T.070-5221-2387

이재윤

선임변호사 T.070-7510-1822